

## 한-EU, 경제안보·공급망 포괄하는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 합의

- 철강·배터리·CBAM·원전 등 핵심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 측 입장도 강력히 전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Borys Budka)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EU 미래지향적 협력 프레임워크, ▲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TRQ) 도입 계획 ▲배터리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체코원전 역외보조금 조사(FS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등 주요 통상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이행 등 국제 통상질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디지털·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 주요 논의 성과 및 내용 】

#### ○ (협력 프레임워크)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 및 차세대 전략대화 출범 제안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Reshape)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에 우리측은 한-EU 협력의 실질적 고도화를 위한 양대 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축은 제조·산업 분야 잠재적 위험 관리(Managing potential trade/investment risks)로서 EU 내 한국 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투명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신통상 분야 미래협력 강화(Deepening the partnership in emerging issues)로서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신통상 분야에서 공동 의제를 도출하고,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양측은 이러한 추진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하여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새로 출범할 전략 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 (철강) 신규 수입규제 도입 시 한국산 쿼터 확보 및 배려 요청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26.6월)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업계의 입장과 우려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한국이 자동차·가전 등 EU 내 주요 산업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며 EU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EU 측의 신규 조치가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설비 조정·저탄소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은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First Group)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 (배터리) 투자 기업 지원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 요청

배터리 분야에서는 헝가리, 폴란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 강화의 주역임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옴니버스 패키지 등)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Energy Intensive Industry Sector)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보리스 부드카 산업연구위원장은 유럽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의 약 절반이 한국 기업에 의해 구축되었다며, 사실상 유럽과 한국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한-EU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배터리 공급망 중심의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 (CBAM) 제도 이행의 합리성 제고 및 이중규제 방지 요청

본격 시행(26.1월)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최근 CBAM 본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이 제기한 인증서 요건 완화 및 중소기업 면제 기준 신설 등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자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기관 인정기준 등 핵심 하위규정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무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확정·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될 경우, 공급망 하단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현행 기본 상품(basic goods)에 대한 영향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확대 적용을 중지하고, 향후 검토 시에도 EU ETS 비대상 공정은 제외하는 등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탄소 가격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 (원전) 체코 원전 FSR 조사에 대한 우려제기 및 공정한 처리 요청

EU집행위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강조하며,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어 EU 측의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하며, 조사가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양측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 (디지털)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

양측은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이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차기 고위급 교류 계기에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신규 철강규제, CBAM, FSR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 안보 등 미래지향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향후에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끝.

|       |                      |     |     |                    |
|-------|----------------------|-----|-----|--------------------|
| 담당 부서 | 통상정책국<br>구주통상과       | 책임자 | 과 장 | 양정식 (044-203-5660) |
|       |                      | 담당자 | 사무관 | 하정욱 (044-203-5665) |
|       | 다자통상법무관<br>통상법무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이원희 (044-203-5940) |
|       |                      | 담당자 | 사무관 | 정인경 (044-203-5944) |
|       | 신통상전략지원관<br>기후에너지통상과 | 책임자 | 과 장 | 윤진영 (044-203-489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경은 (044-203-4891) |
|       | 원전전략기획관<br>원전수출협력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이한철 (044-203-5280) |
|       |                      | 담당자 | 서기관 | 한대건 (044-203-5281) |
|       | 첨단산업정책관<br>배터리전기전자과  | 책임자 | 과 장 | 박재정 (044-203-426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문일 (044-203-4263) |

